

경제부총리에 전북현안 해결 건의

김관영 도지사, 새만금신항 적기 구축·배후부지 재정전환 등 정부 지원 요청
도, 정부예산 최대 확보 위해 내일 시군·정치권과 예산협의회 열고 공조강화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전북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과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새만금신항 적기 구축 및 배후부지 재정전환, 새만금사업 기반시설

(SOC) 예비타당성조사 일괄 면제,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국비 31.5억) 등 3건의 현안과 주요사업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새만금신항 적기 구축 및 배후부지 재정전환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공약 사항으로 새만금신항은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나 신규

항만은 민자유치가 어려우므로 항만으로의 가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1989년 국책사업으로 시작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6년 전 새만금사업법(특별법)이 제정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0건의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으로 개발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김관영 지사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재정부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등 12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새만금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지매입·조성 및 기반시설(SOC)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어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 농업인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강조하며 먼저 내년도 부지 기반조성비 31억5,000만원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내도사면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김제 신평~혁신도시 지방도(702호) 확장, 완주 용진~전주 평화동 도로 개선 등을 추가로 건의했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11일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전북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체계를 다지고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김 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8월까지 부처예산안에 대한 기재부 심의가 진행중인 만큼 기재부를 방문해 제2차관 및 예산실장 등을 만나 도 중점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전북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과 국비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올 여름 집중호우 대비 침수방지 대책 마련을”

남관우 전주시의원, “지하주택 대상 대책 시급”
전주시내 상습침수지역 종합대책 수립 등 제안

남관우 전주시의원(진북동 인후1·2동, 금암1·2동, 사직)은 반지하 주택 등 침수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0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사전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요 근래 이상기후로 인해 기록적인 폭우가 매년 반복되고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로부터 취약한 지하주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특히, 2020년 이래 덕진구 일대 지역은 물이 도로까지 범람해 30여 가구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침수방지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전주시 여름철 집중 호우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의 주장을 요약하면 3가지 사항으로 분류된다.

남 의원은 먼저 “전주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반지하 주택 등 재해에 취약한 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관리에 사전 재난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둘째로 그는 “전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반지하 주택 및 소규모 주택의 방수 시설을 강화해야 한다. 물막이판은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기존 공동주택에 설



치한 곳은 총 10곳에 불과해, 반지하나 소규모 주택에 대한 설치 지원이 매우 시급하다.”며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지하 공간 침수 발생 시 탈출이 쉽도록 개폐가 가능한 방범창이나 실내 비상 탈출 사다리 등 피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에 침수되고 시 자동 개폐 출입문이 제대로 설치 및 작동 되는지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고 제시했다.

그는 셋째로 “지역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며 “지역 전체의 침수방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교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일부 집주인이 수해 지역 내 인화물을 우려해 침수방지 물막이판 설치를 거부하지 않도록 물막이판의 필요성과 효과를 주민들이 인식하도록 개선 및 홍보가 필요하고, 특히 반지하는 침수 시 비상 대피 훈련 실시 및 물막이판의 필요성과 인식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반지하 주택 등 침수 특별관리대상에 대한 물막이판 설치 등 재정지원과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욱기 기자

주취자로 인한 위험 방지 필요 법적 근거 규정

민주 윤준병 의원, ‘주취자 보호 특별법안’ 대표발의
“일반 시민 생명·재산 보호, 공공질서 유지 기여하려는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주취 상태에 놓인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주취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등을 특별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주취자 대응에 따른 치안공백 사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상

취 상태가 된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주취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절차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동 제정법안의 입법취지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제정법안에는 양기대·조정식·양항자·양경숙·최종윤·민병덕·민형배·이상현·위성곤·신정훈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조배숙 국회 당당위원장 선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에 단독 출마한 조배숙 전 의원이 7일 열린 제4차 전북도당운영위원회를 통해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의원 77명의 명부를 확정하고 후보등록 접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당헌·당규에 따라 이날 도당운영위원회에서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도록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임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은 추후 7월 중으로 중앙당 최고위원직 의결을 거쳐 승인될 예정이다. /뉴시스

대둔산도립공원 활성화 간담회 개최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대둔산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9일 밝혔다.

현장에는 권요안 도의원, 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 조영식 완주부군수 등 관계자가 참석해 대둔산도립공원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권요안 의원은 “전북도 도립공원 관리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23년 6월 까지 도립공원 방문객 수는 모악산 3,179만명, 선운산 1,407만명, 마이산 828만명이지만 대둔산은 425만명에 불

과하다”면서, “전북도와 완주군은 대둔산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해 낙후된 주변 지역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 조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은 “대둔산도립공원은 동학농민운동 최후 항전지가 있는 역사적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전북도와 완주군은 동학혁명의 정신이 깃든 대둔산도립공원 홍보와 가치 보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